

이슈브리프 810호  
(2026. 3. 3)

## 9차 당대회와 북한 군사전략의 전환: 핵무기 보유에서 운용으로

# 제810호

김보미 [bomi@inss.re.kr](mailto:bomi@inss.re.kr)



## 국문초록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북한 군사전략의 단순한 연속이 아니라 단계적 전환의 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은 여전히 체제 전략의 불가역적 축으로 유지되었으나, 전략의 방점은 양적 확대를 넘어 전력화 및 운용체계의 질적 고도화로 뚜렷하게 이동하였다. 미진했던 무기체계의 개발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기보유 전략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통합된 지휘통제 체계 속에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와 군 구조의 개편, 교리 및 지휘통제 체계의 정비 역시 핵·재래식 결합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특히 무기 시험과 성능 과시를 억제력의 '책임적 행사'로 규정함으로써, 군사적 시위를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9차 당대회는 북한이 핵무력의 양적 고도화를 넘어, 핵을 실제 전쟁 수행 체계 속에 구조적으로 내재화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당대회, 김정은, 병진노선, 핵·재래식 결합, 핵전략

## 9차 당대회와 북한 군사전략의 방향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당대회 개회사와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8기 기간 동안 설정한 주요 목표들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당대회를 단순한 ‘성과의 확인’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의미화하고자 했다. 특히 국방 분야는 북한이 지난 5년간 가장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 온 영역이자 가시적 성과를 축적한 핵심 분야라는 점에서 대회의 주요 분석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8기 기간 동안 북한은 전략무기 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를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제9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이 어떤 야심찬 국방력 강화 계획을 제시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정은은 2025년 9월 국방과학원 방문 당시 핵과 재래식 무력의 병진노선을 9차 당대회에서 제기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9차 당대회가 단순한 성과 점검을 넘어, 고도화된 군사력을 전제로 한 다음 단계의 전략 구상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었다. 관건은 향후 군사력 발전의 방향이 양적 확대에 방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지휘통제·전술교리·핵 운용 개념 등 질적 고도화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킬 것인지에 있었다. 특히 핵을 포함한 전쟁 수행 전략의 변화 여부는 대외 억제 전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 노선은 향후 한반도 안보 환경에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 핵무력의 구조적 고착과 전략적 상수화

예상대로 북한은 핵무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당 대회 3일차, 당 비서인 리일환은 김정은을 당비서로 재추대하는 제의서에서 “국방이 선차냐, 경제가 선차냐를 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며 이제는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과거 군사력과 경제 중 선택의 기로에서 있던 북한이 결국 군사력, 특히 핵무력 강화의 길을 택했으며,

그 선택이 옳았음이 이미 증명되었다는 자기 확신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강력한 핵무력 건설을 통해 국가의 생존과 체제를 보장했으며, 그 토대 위에서 경제발전도 가능해졌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발언을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9차 당대회에서 드러난 담론은 핵무력 고도화를 일시적, 과도기적 과업이 아니라 구조적 상수로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무력 강화 노선은 정책적 선택지가 아니라, 체제 전략의 불가역적 축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당대회 보도에서 노동당과 내각은 “핵기술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제공, 지원할 것”을 명시했으며, “연차별로 국가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천명함으로써 핵무력 강화 기조가 중단 없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더 나아가 북한은 핵무기를 국가 정체성과 대외 지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규정하였다. 리일환은 핵무력을 “주체적 힘”으로 지칭하며, 이를 통해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존엄이 역사상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함부로 건드릴서는 안되는 위험한 상대”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월 26일 발표된 9차 당대회 보도는 핵무력을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기본담보이고 강력한 안전장치”로 규정하였다. 결국 핵무기는 북한의 군사전략에서 억제수단을 넘어서, 대외 지위의 상징이자 국가발전의 충분조건이기도 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이 유지되는 한, 9기에서도 핵무력 강화 노선 자체가 후퇴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8기의 미완 과업과 전력화 완성 계획

그러나 9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 군사 관련 보도는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북한이 이미 일정 수준의 다종화(diversification)를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여건상 새롭게 도전할

무기체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미 최우선 5대 과업과 최종대 사업에서 야심찬 계획을 제시하였고,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외부의 평가와는 별개로 시험발사를 통해 능력 진전을 과시해왔다.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20형’을 공개하여 동체경량화와 추진체 성능 개량을 강조했고, ‘화성-11마’를 통해 극초음속 기반 미사일 시험에서도 일정 수준의 기술적 진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무기체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9차 당대회에서는 미완 과업의 ‘완성’에 방점이 찍혔다. 북한은 향후 5년 동안 “지상 및 수중 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종합체, 인공지능 무인공격종합체, 위성공격 자산, 전자전 무기체계, 진화한 정찰 위성”을 중점 개발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SLBM, 정찰위성,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8기에서 기술적 진척이 더뎠던 무기체계들은 재차 중점 과제 안에 포함되었다.

해군력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정은이 “제2차 함선공업혁명”을 대대적으로 선언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2025년 10월 최현호의 성능 및 작전 평가 지시 이후에도 최현호의 출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현호를 비롯하여 최근 몇 년 간 북한이 개발한 주요 함정들의 시험 출항과 실전 운용 경험의 부족으로 항해 안정성, 전술적 운용 능력, 미사일 발사 체계의 신뢰성 및 핵심 성능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9차 당대회에서는 해군력 강화가 중장기적 핵심 과제로 재확인되었고, 다종의 해상전력 확보와 운용 능력 제고의 병행 방침이 제기되었다.

김정은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해군 수상 및 수중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작전능력을 급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갱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전략잠수함 확보, 기존 함정의 센서 개량과 미사일 탑재능력과 작전 및 운용 능력 향상 등이 주요 과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중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종합체”를 개발 선언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장거리 해상 기반 전략 억제력을 완성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핵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개발’에서 ‘실전 운용’으로

북한은 이번 9차 당대회에서 단순히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넘어, 전시 상황에 초점이 맞춰진 실전 운용체계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대회 보도에 따르면 향후 5개년 전망계획의 중요한 과업은 기존에 개발된 신형 무기들의 실전 배치를 촉진하는 데 있으며, 이는 핵탄두의 생산 단계를 넘어 즉각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핵무기들의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인 타격 수단들과 운용지원체계들을 갱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핵물질과 핵탄두 생산에만 핵무력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운반 수단, 지휘통제, 통신, 경보 등 핵무력 전반을 통합하는 체계적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실제로 8기 기간 동안 정찰위성 발사와 조기 경보, 위치 감지 능력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일부 기술적 향상을 이뤄낸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정교해진 핵무기 가동체계와 예민한 반응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같은 기술적 진보가 북한이 전장에서 다양한 핵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핵무력의 존재 자체와 보복 능력 과시에 초점을 맞추었던 북한은 이제 자동화되고 다층적인 핵운용 단계로 확실히 이행하는 모습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이전과 달리 다중화·경량화·지능화와 같은 기술적 슬로건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과제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기술 개발 단계에서 전력화와 운용의 단계로 담론의 중심이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600mm 대구경 방사포(KN-25)의 전력화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당 대회 직전인 2월 18일, 김정은이 직접 증정식에 참여해 해당 무기체계의

실전 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당대회에서는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 타격수단으로 소개하였다. 이 무기체계는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온 만큼, 북한이 전략핵뿐만 아니라 전술핵 차원에서도 실전 운용 능력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김정은이 증정식에서 강조한 “전술미사일의 정밀성과 방사포의 연발사격기능의 결합”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추구하는 “예민한 반응성”의 기술적 구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지휘부의 결심 즉시 다량의 화력을 불의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인공지능 기술과 복합유도체계”가 도입되었다는 주장 또한 운용체계가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는 북한이 한반도 억제 구조를 정밀화하고, 다층적·복합적 핵전략으로의 진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핵·재래식 통합과 군의 대응체계 개편

지난해 9월, 김정은은 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의 병진 노선이 제기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결과 보도에서는 북한의 “상용무기들을 세계적 수준의 위력한 무기들로 갱신하는 사업”을 강군건설의 핵심으로 명시하며 비교적 간략히 다루었으나,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에도 상당한 투자를 공식화함에 따라, 군 구조 전반에 많은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첫째, 효율적인 군사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기존 조직들을 재편하거나, 재래식-핵 결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력 현대화’ 방침에 따라 재래식 무기 운용 부대의 재편이 진행되고, 신형 무기체계에 특화된 신규 부대의 창설이나 기존 부대의 임무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김정은이 사업총화보고에서 “모든 군사기지들을 표준화제로 갱신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며 새로운 군사하부구조들을 건설하기 위한 전망적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년차별로 집행”

해나가야 할 것을 주문한 것은, 군의 인프라와 조직 구조의 변화가 모두 수반될 것임을 예고한다.

둘째, 재래식 전력과 핵무력의 결합을 전제로 한 새로운 지휘통제 및 작전 체계의 정비 가능성이 대두된다. 특히 전술적 차원에서 구시대적 작전 개념을 변화하고, 재래식-핵 결합 작전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지휘작전체계가 일부 부대에 시범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에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군사교육혁명과 훈련혁명을 더욱 고조시켜 인민군대의 전쟁 수행 능력 강화에서 중대한 진보를 가져올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는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교리 및 교육 체계의 개편을 주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이 시도하는 이러한 변화에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통합 지휘통제체계의 운영과 실시간 정보 공유, 드론 기반 정찰, 연합작전 수행 등 전장에 배치된 파병군이 실전환경에서 습득한 작전 경험이 누적되면서, 귀국 후 훈련 교범의 개선이나 장비 운용 절차 등에 반영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파병군들이 전장 환경에서 전술이나 장비운용 능력 등 확보한 노하우가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재래식 전력 향상에 점진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변화들이 대대적인 군사혁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군사적 성과가 외부 의존의 결과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력을 ‘주체의 상징’이자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겨왔으며, 군사강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왔다. 따라서 대러 밀착을 통한 군사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를 공식화하는 것은 체제 정당성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대러 파병을 통해 얻은 실전 경험이나 러시아로부터 얻은 기술적 학습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북한은 이를 ‘주체’의 틀 속에서 ‘우리식’으로 재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미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준 무기 체계들의 실전 배치를 촉진하고, 미완의 영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당면한 군사 목표로 삼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무기 시험과 성능 검증 활동을 억제력의 실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9차 당대회 보도에서 “핵억제력 구성부분들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쟁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주장하며, 무력 시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는 김정은이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에서 언급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이라는 발언과도 궤를 같이한다. 결국 북한이 제시한 억제 논리는 적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언제든 처절한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만들어야 한다”는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북한은 무기 개발과 전력화, 그리고 시험발사를 통해 공격 능력을 가시화하는 행위 자체를 억제력의 실질적 행사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의 의사결정에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9차 당대회는 북한이 핵무력의 양적 고도화를 넘어, 이를 실제 전쟁 수행(warfighting) 체계에 구조적으로 내재화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중대 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